

與 ‘野, ‘답정너’식 정쟁’ vs 野 ‘임성근 구하기 경찰 일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與野, ‘임성근 불송치’ 공방

이성권 “사실왜곡·법리 오해 있어”
용혜인 “경북경찰청, 임 변호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 윤희근 경찰청장(왼쪽 첫 번째)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1주기가 오는 1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미리 경찰에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가까워지면서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논란과 대립을 해왔던 정쟁을 종식하고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때문에 결과가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결론을 다 내려놓고 ‘답정너’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실왜곡과 법리 오해도 있는 것 같다”며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은 경북경찰청에서 이야기한 것이어서 사망 원인과 그와 관련 혐의 적시가

필요한 인원 발굴에 한정돼 있는 것이고, 외압과 관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희근 청장에게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변호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윤 청장이 “없다”고 하자 용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1년 가까이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

이 내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묻자 윤 청장은 “저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만 국민들이 기대하신 것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해병대 7여단장은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한 것을 둔 것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경북청 보도자료를 보면

7여단장에 대해서 포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오인 지시가 직접 원인이지만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의 견을 냈다”며 “그러면서 (7여단장에 대해) ‘내부 논의과정에서 관리 감독 소홀이 사망의 인과관계로 보기에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경북경찰청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굳이 반대로 적용했다.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인 것을 뺀히 인정하면서도, 7월19일까지 했던 모든 지휘행사가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한 수사결과, 한 보도자료 안에서도 이중잣대를 거리낌 없이 들이대면서 임성근 구하기에 경북청이 일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용 의원이 “추후 특검을 통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윤 청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임성근 변호를 작심했다고 해도 논리를 형편없이 조각하면서 불기소를 결정할지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빅테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구하라법·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상정

21대 국회 폐기·거부권 행사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제외 당 내부적인 이견 있어...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구하라법·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내부적인 이견으로 당 초 계획했던 8개 법안 중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하라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이 중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부모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 상

실 선고 제도를 신설해 피상속자가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선 ‘제2조제4호라목’이

삭제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노동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이 당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당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방법론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짐작한다”고 답했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

초연경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서비스 리더

20th BPA 20주년 부산항만공사 창립 20주년

세계 2위 원적양만

1,241만 TEU

세계 4위 항만 연결성

주 287개 항로

국내 1위 항만

2,315만 TEU, 4.3억 톤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함께한 20년, 도약의 100년으로!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0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BPA 부산항만공사
BUSAN PORT AUTHORITY